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김 인 숙*

1. 머리말

필자는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조형은 가치기반의 명료화, 지식기반의 체계화, 정치사회적 구조에 대한 반응의 3가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가치기반과 지식기반이 정체성 논의의 학문내적 측면이라면 정치사회적 구조는 학문외적 측면인데, 이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해당 사회에서 사회복지실천이 특정의 형태로 존재케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논의의 축을 두 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하나는 사회복지전문직이 조형되는 정치사회적 구조와 분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역할 즉, 가치의 문제이다.

여기서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파악을 위해 정치사회적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구조론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조론적 시각이란 학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장과 연결된 다양한 사회구조의 장들의 연결관계가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 학문의 성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으로 학문과 권력의 상호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분석의 차원으로 등장하게 된다(홍성민, 2001). 필자는 사회복지실천의 조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적 구조 요인을 4가지로 보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사회내 구조적 위치, 정부 개입의 본질, 관할영역 투쟁, 사회운동과의 조우이다. 그리고 가치의 문제는 사회복지학이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규범지향적인 학문으로 알려져 있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의 여타 측면들 예를 들어, 이론과 교육, 연구 등은 그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 안내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김용일, 2003)는 점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논의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필자가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논의의 축을 가치와 정치사회적 구조로 압축하는 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학문 내재적 이유나 논리 때문만은 아니다. 학문 외재적 차원에서도 이 두 축을 중심으로한 정체성 논의의 필요성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이혼률의 급격한 증가로 상징되는 엄청난 사회·인구학적 변화에 직면해 당황해 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의 지구화로 인한 신자유주의적 압력들은 정부와 사회 곳곳에서 그 위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것은 신빈곤층을 비롯한 계층의 양극화 현상과 삶의 안정성 약화 그리고 복지를 비롯한 공공성 영역의 사유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이전과는 다른 한국 사회의 거대 변화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 거대 변화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와 직업 영역을 창출해 낼 것이고, 이를 놓고 관련 이해집단간의 이전투구가 더 거세질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실천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토대 위에서 서 있는 셈인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사회복지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나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과 관련해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실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가치의 문제)과,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확고한 사회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즉,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정치·사회적 구조의 영향에 주목하여 사회복지실천의 독점적 혹은 확정적 영역과 역할을 정치적 투쟁을 통해 어떻게 획득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이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정치사회적’ 측면을 주시하고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적, 윤리적 기반”을 명확히 하므로써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문제 혹은 사회복지전문직의 미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사회복지전문직 공동체의 적극적인 정치적 선택과 결정 그리고 이를 위한 투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지향

1)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의 위치와 역할

사회복지실천은 가치기반의 전문직(value-based profession)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가치에 대한 중요성과 찬사는 사회복지 문헌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치와 미션이 없는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실천이 아니며, 가치야말로 사회복지 전문직을 다른 것과 구별짓게 해

주고 실천과 교육과 연구를 안내하는 가이드이고(Bisman, 2001), 실천의 모든 측면이 사용되거나 버려지거나 수정되게 하는 것은 가치에의 적합성 여부이며(Sach & Newdom, 1999),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실천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근본이며(Skerrett, 2000), 가치론적 체계의 정립이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에 등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며(이부덕, 1997), 더 나아가 사회복지실천을 포함한 사회복지학 자체가 가치학문이고 규범학문(김용일, 2003)이라는 주장에서 우리는 “가치”의 “확고부동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가치에 기반한 전문직”이라는 말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치에 기반한 전문직”이라는 말은 일견 과연 가치에 기반하지 않는 학문이 존재하는가 라는 냉소 섞인 비아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대인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과학”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과학에 기반한 전문직”이라고 했으면 이 언어가 표상 하는 객관성과 중립성,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 사회복지실천은 대중적 설득력을 획득하여 지금 보다 더 확고한 전문직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까? 실제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사회복지실천은 당시 대중들로부터 인정받던 “(정신)과학”을 수용하여 “과학에 기반한 전문직”을 실현한 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헌상의 수사와 논의는 “가치 기반의 전문직”에 집중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가치에 기반한 전문직”이라는 명제는 특정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의 양태와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게 하며 미래에의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논거로 얘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이 가치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실천의 대상인 인간관계와 인간 간 유대 문제의 핵심 과제가 과학성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가치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동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어떤 복지분야에서 일하던 어떤 이론에 의지하던 간에 지향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에 의존할 것을 제안하지 않고 “가치”에 의존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중립성과 객관성의 신화를 넘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 판단과 동의를 필요로 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치의 문제가 형상화되는 일반적 방식은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무엇이며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이다.

서구의 문헌들을 검토해 보면, 이에 관한 논의는 “사회개혁 대 개인치료(혹은 사회정의 대 개인보호)”라는 큰 우산 속에 모여져 있다. “사회개혁 대 개인치료”라는 서로 상반되는 듯한 추상적이고 이분법적인 이 두 가치는 서구 사회복지실천과 교육의 역사에서 논란이 되고 긴장관계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 두 가치의 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 양자의 통합이 가능하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입장(Lynn, 1999; Haynes, 1998; Swenson, C.R, 1998)과 어느 한쪽의 가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Abramovitz, M., 1998)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이 비판을 받는 것은 실제로 사회

복지실천 내에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했던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회개혁 대 개인치료”의 한계를 인식한 사람들은 새로운 틀로의 접근 필요성을 주장하거나(Glasser, 2001), 개인 보호(개인치료)는 클라이언트를 병리화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위험이 있고 사회정의(사회개혁)는 개인적 희망이나 두려움 기대 등을 주변화시킬 위험이 있다(Lynn, 1999)는 양비론적 입장으로, 혹은 사회정의가 실천을 조직화하는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임상사회사업도 바탕이 되는 이론과 실천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회정의적 시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절충적 제안으로 이 두 가치에 대한 딜레마의 극복을 시도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구의 사회복지실천 역사에서 이 두 가치는 그 시대의 사회정치적 분위기와 경제적 환경 여하에 따라 우위를 달리했다는 사실이다(Gibelman, 1999).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포효가 전세계적으로 계속되는 현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복지사연맹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계는 경제의 지구화로 인한 국가내, 국가간 불평등 구조의 심화라는 21세기의 초국가적 현상에 직면하여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定義에 사회개혁적 미션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주된 대상이 취약하고 억압받고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실천의 지향 가치 또한 인권과 사회정의, 임파워먼트, 인간의 해방 등을 강조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김인숙, 2001). 이는 곧 사회복지실천이 그 사회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느냐 하는 “가치”의 문제 조차 진공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사회정치적 구조와 분위기라는 맥락을 전제로 결정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어떠한가? 필자가 보기에 자생적인 발생적 토대없이 미국식 사회복지실천을 직수입하므로써 탄생한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자국의 토양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미국의 주류 사회복지실천의 변화와 변용을 충실히 쫓아갔다고 본다. 적어도 교육에서는 그러했다.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교육은 탈역사적으로 탈사회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탈역사성과 탈사회성은 자연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한국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주체적 사유를 방해하였고 그 결과 ‘가치’의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하였다. 이는 70년대, 80년대의 유신과 군사독재라는 엄호한 현실에서 조차 케이스워 중심의 개인치료 패러다임의 틀을 고수한 점, 90년대 이전까지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전무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서구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사회가 정치적으로 보수화 될 때 사회복지실천의 사회개혁 미션은 줄어들었고 사회가 정치적으로 진보의 방향을 취할 때 사회개혁의 미션이 강화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70년대와 80년대의 파시스트적 사회분위기에서 어떤 진전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였는 지도 모르겠다. 사회복지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90년대 이후 들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논의의 초점에서 “가치”의 문제는 배제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사회복지실천의 틀은 우리 사회전체의 발전 정도와 수준을 반영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가 본격적으로 대중속에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들어서라고 본다면 그리고 한국사회에 시민사회가 싹트기 시작한 시점 역시 90년대라고 본다면 현 시점이야말로 사회복지실천의 기초를 이루는 “가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사실, 한국사회는 그 태생상 서구사회가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자랑하는 “사회개혁”과 “개인치료”의 전통을 가지지도 발전시키지도 못하였다. 한국사회는 이제서야 그러한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갖춘 만큼 서구의 ‘사회개혁’과 “개인치료”라는 이분법적 지평을 뛰어넘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에 대해 논해야 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므로써 나름의 독자적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단, 우려되는 것은 최근 책임성의 가치에 입각한 효과성과 효율성의 초도덕적 가치가 한국의 사회복지실천계를 지나치게 압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것이 지나치면 책임성을 묻는 주체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직적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치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직)화 지향

오늘날 한국 사회복지실천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핵심 화두는 “전문(직)화”이다. “전문(직)화”는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지점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전문(직)화에 대한 그 어떤 담론도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화된 전문적 실천이야말로 훌륭하고 올바른 실천이자 이론이며 기준(Abramovitz, 1998)이고, 전문화가 되면 사회내에서 높은 위상과 특권과 독자적 자율성을 갖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를 넘은 이 “갈망”은 마치 안개속의 풍경과 같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실체로 우리곁에 존재한다. 왜 전문화를 해야하며, 그 핵심 가치, 방향,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고, 전문화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화의 구호와 메아리만 들릴 뿐 도무지 그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는 사회복지전문직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실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견해(Lee, 2001)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치에 기반한 전문직”이 “전문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가치”의 문제라는 점이다. 충돌의 핵심 내용은 사회복지실천이 전문직화 되면 필수룩 사회개혁적 가치 지향에서 멀어져 현상유지적이거나 사회통제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충돌의 이유로 거론되는 논리는 3가지인데, 하나는 사회복지실천이 전문화 추구를 통해 전문적으로 제도화되면 사회개혁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이고(Haynes, 1998; 이태영, 2001; 김미원, 1997),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실천이 작동되는 맥락이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적 메카니즘에 의해 실천의 비전이 좁아져 현상유지에 압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Wenocur & Reisch, 2001),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 지향은 개인치료 패러다임의 지배를 가져와 사회복지실천가를 사회변화의 주변에 머무르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Jacosen, 2001).

실제로 시장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 과정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할을 “개혁옹호(cause)”에서 “기술중심의 서비스 제공(function)”으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이동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평가절하하고 사회복지실천과 사회개혁은 서로 섞여질 수 없다는 결론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Abramovitz, 1998). 영국의 경우는 1970년대 “반전문가주의”를 들고나온 급진적 사회복지실천이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직화에 대한 비등한 비판과 반발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은 반차별과 반억압을 가치 지향으로 설정하고 실천의 전통을 만들어 나갔다(Lymbery, 2001). 그 결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전문가”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자원”으로 이동된 바 있다(Penna, Paylor & Washington, 2000).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직)화 지향에 대한 이러한 지적들은 “전문가주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professionalism)” 즉, 전문가주의 지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주목하고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전문화 지향이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딜레마는 사회복지실천이 포기하기 어려운 “사회개혁”의 가치 지향을 어떻게 “전문(직)화” 속에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전문(직)화와 사회개혁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들은 3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재구조화” 입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사회정의적 시각에서 임상사회복지실천을 재조직하자는 Swenson(1998)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Swenson(1998)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개념보다는 사회복지실천의 가치를 조직화시켜주는 것으로서 사회정의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론과 모델의 선택 여하에 따라 임상사회복지사도 충분히 사회정의에 입각한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정의적 가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임상사회복지실천의 이론 및 실천방법 10가지를 제안하였다. 이 입장은 개인치료와 사회개혁이 서로 분리되는 이분법적 가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서 개인치료와 사회개혁을 재해석한 전문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소위 “병합론”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입장도 개인치료와 사회개혁을 함께 끌고 가자는 면에서는 “재구조화” 입장과 동일하나 그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두 가치의 독자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일대일로

병합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 사회복지사가 임상가이면서 동시에 행동가가 될 수 있도록 두 개의 가치와 그에 부합하는 이론을 교육하자는 것이다(김성천, 1995). 마지막으로 개인치료와 사회개혁의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는 “선택론” 입장을 들 수 있는데, 영국의 사회복지실천이 관료화되고 국가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치료모델의 부흥을 주장한 O'Neill(1999)이나 미국의 학생들이 개업실천을 선택하는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회개혁적 가치를 기반으로 제도적 미션의 중요성을 주장한 Specht & Courtney(1995)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에는 가치와 전문(직)화간의 충돌에 주목하거나 혹은 그 대안을 제시한 논의는 매우 미미하다(김미원, 1997; 김인숙, 2001). 아울러 이를 교과서나 교육과정 혹은 실천행위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현상의 진면목과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가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필자의 직관적 판단으로는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개인치료와 사회개혁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끌고 가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사회정의나 사회개혁의 가치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과서 내용, 연구논문 등에 이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한국에서 지역사회복지를 표적으로 한 실천활동이 부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미약하다는 지적(황성철, 1997)에서도 드러난다. 그렇다고 개인치료의 가치가 부상되어 이를 심도있게 철저히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뚜렷한 가치 지향에 대한 논의와 합의 없이 미국의 교육과정을 수입하여 일부 변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후세대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문(직)화”라는 화두에 맞닥뜨려 그 답을 찾으려고 고민 중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치와 전문화간 충돌에 대한 대안은 “재구조화” 입장에 가깝다. 사회복지실천의 원래의 출발로 되돌아가면 그 정신은 개인치료와 사회개혁 모두를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자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개인치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도적 미션이나 사회개혁적 미션이 빠진 개인치료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것은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논쟁적 이슈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분위기에 적응하여 자기 영토의 구축이나 서비스의 효과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전문직적 권위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개인치료의 전통을 사회정의적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그에 합당한 혹은 기존의 주류적 패러다임과는 다른 다양한 이론과 실천방법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가치 지향은 한국사회의 거대구조인 시장경제라는 맥락, 정부 입법과 개입의 본질, 사회운동의 영향 등 사회복지실천 외적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역할과 지형이 짜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치” 지향은 사회복지실천의 경계지움의 근본적 동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게 하여 현상황에 도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Sachs & Newdom, 1999)는 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3.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정치사회적 구조

1) 사회복지실천의 사회내 구조적 위치

사회복지실천은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실체이자(Skerrett, 2000) 정치적 장(Abramovitz, 1998)이다.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이 정치적 투쟁의 장인 것은 역사적 경험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서구의 역사를 보면 학문내적으로 개인치료와 사회개혁 간의 정치적 투쟁 과정이었고, 학문외적으로는 사회복지실천 외부로부터 현상유지의 시녀이니 치료기업으로의 변모이니 하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실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학문내적으로는 미국이 경험한 가치 갈등을 거치지 않고 그 결과만 그대로 도입했기 때문에 아직 이념상의 공식적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의 인력 풀이 넓어지면서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가치 지향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학문 외적으로는 시민사회의 등장과 함께 시민운동계와 사회운동계로부터 너무 보수적이 라든가 현상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이 학문내·외적으로 정치적 논쟁의 외중에 서게되는 데는 무엇 보다도 사회복지실천의 사회내에서의 구조적 위치가 한 몫을 한다. 이 때 말하는 가장 강력한 구조는 사회복지실천이 시장경제적 메카니즘 안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선, 사회복지실천이 시장경제적 메카니즘 안에 존재하는 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사회복지실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조건하에서의 노동분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심리사회적 손상과 배제의 위협에 처한 노동력을 개선하고 보장하는 사회적 으로 필요한 재생산 노동에 속한다(김미원, 1997). 그러나 이러한 재생산 노동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지배 원리인 자본축적의 원리 즉, 이윤창출이나 생산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와 시장경제의 요구간의 갈등을 매개하는 사회복지실천을 매우 어려운 위치에 처 하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개혁적 아젠다를 제기하려는 사회복지실 천은 생산성 중심의 이윤추구 시장경제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고, 본래의 의 지와는 달리 시장이 요구하는 메카니즘에의 순응과 적응이라는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 더 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압력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가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 실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실천의 운신의 폭은 강고한 시장경제적 작동 기제라는 조건하에서

더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적 기제는 사회복지실천의 모든 측면을 시장구조의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강력한 힘의 근원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이 처한 이러한 구조적 위치에 “전문(직)화”가 결합되면 자체 논리에 의해 사회복지실천은 특정의 기제를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사회복지실천이 전문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직업적 역할의 근거를 관료조직과 결부된 지위가 아니라 전문지식을 근거로 사회적 지위를 재가받으므로써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 역할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김미원, 1997). 이렇게 되면 사회내에서 전문직으로서의 확고한 위치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실천은 시장경제 메카니즘에 합당한 지식기반을 개발하거나, 거대 소비자 집단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제하고자 하거나, 이들 거대 소비자 집단에 어필할 수 있는 복지상품을 만들어내고자 할 것이다(Abramovitz, M., 1998). 이러한 작동 기제적 조건하에서 만일 국가개입이나 사회운동, 사회복지 학문공동체의 자체 결단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면 이 양자간의 순수한 관계는 아마도 사회복지실천의 양상을 특정 방향으로 선화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를들어, 시장과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므로써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빈곤층을 넘어 광대한 중산층 집단을 포괄하게 될 것이고, 중산층 집단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팽창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실천은 지금보다 더 그 정체성과 통합성의 혼란이라는 회생을 감내해야 할지 모르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일의 본질이 변화되므로써 원래의 사회복지실천의 비전을 퇴조시키게 될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복지에 대한 국가주의적 개념이 세계화로 인해 급격히 수정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사회복지실천 내에 시장구조의 확립을 촉진하였고 사회복지실천의 많은 기능들을 사적실천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사회복지실천가들의 직업보장이 약화되고 이들이 하는 일의 본질이 변화되었으며, 사회복지실천 조직들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전문화하는 “고객” 지향의 기업으로 변모되는 등 사회복지실천의 역할이 서비스 제공자에서 공급자와 “고객”이라는 시장관계로 변화하였다(Penna, Paylor & Washington, 2000).

한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신자유주의화의 세계적 영향(IMF, ILO 등)에 있음은 자명한데, 이는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메카니즘하에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를 초월한 세계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적 규제가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에 가해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신빈곤층의 출현과 비정규직의 사회문제가 이를 말해주며, 이는 동시에 안정과 보장보다는 노동과 생산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시장구조의 강력한 영향하에 한국 사회복지실천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 사회복지실천은 이러한 구조적 기류에 대해 뚜렷한 도전이나 혹은 뚜렷한 호응 중 그 어떤 입장도 유보한 채 모호한 “전문화”의 구호만 외치고 있는 형국인 것 같다. 영국의 경우처럼 진보적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나름의 대안적 형태의 실천모델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경우처럼 새로운 질서에 민첩하게 적응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모습도 아니다. 서구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접근과 모델들이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여과없이 소개되면서 서구 모델의 오판상이라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기류에 대해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것은 이들 기류에 제동을 걸어줄 정당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시민사회의 등장과 사회운동 세력이 어찌면 이러한 비판을 낙관으로 바꾸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을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기는 하다. 확실히, 한국 사회복지실천이 서 있는 사회내 구조적 위치는 사회복지실천의 본래적 목적과 미션을 성취하는데는 매우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현재의 구조적 위치가 한국 사회복지실천에 어떠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틀이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충돌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내에서 모종의 대안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은 반드시 공유될 필요가 있다.

2) 정부개입의 본질

사회복지실천가는 의사나 법률가처럼 자기통제적 의미를 강하게 가진 고전적 의미의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자율성이 부재한 직업도 아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실천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적, 제도적 틀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Tompson, 2002). 이 점은 국가나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입의 본질이 사회복지실천을 특정의 방향으로 이끌며 나아가 사회복지실천가의 사회내 역할 자체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정치사회적 구조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일찍이 사회복지실천은 “국가가 중개하는 전문직(state-mediated profession)”¹⁾(Johnson, 1972) 혹은 “관료전문직(bureau-profession)”²⁾(Parry & Parry, 1979)으로 불리워질 만큼 사회복지실천의 조형에서 국가와 정부의 개입의 본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심지어 국가와 정부의 이러한 힘은 사회복지실천이 의사나 법률가와 같은 전문직에 버금가는 직업적 통제를 갖는 것을 제한할 정도로 강력하기도 하다(Lymbery, 2001).

실제로 지난 수십년간 서구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통제, 사회적으로는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인구학적 변화에 직면하였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 서비스와 보건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켜 왔고 이는 동시에 정부의 복지 비용경감으로 이어져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을 복지비용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하는 압

1) 국가가 실천가와 클라이언트간 관계에 개입하는 전문직이라는 의미로서 법과 정책적 틀을 통해 국가가 개입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함.

2) 자율적인 전문직 의사결정과 관료적 위계 사이의 긴장을 관리하는 전문직이라는 의미임

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인 보수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를 예산삭감과 절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관리에 초점을 두게 하였고,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이미지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의하도록 하였다(Holosko & Leslie, 2001). 그 결과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이 “보호 제공자”에서 “관리자”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또 다시 사회복지실천가들을 “관리자주의”³⁾라는 준거틀 내에서 자신들의 일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밖에 없게 하는 순환구조 속에 있도록 하였다(Lymbery, 2001).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실천가의 “관리자”로서의 역할 이동을 더욱 자극한 것은 정부가 법적 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실천가의 국가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복지서비스들을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시키고 그로 인해 서비스가 파편화된 것이었다.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관리적 통제의 증가와 관리자로의 역할 이동은 사회복지사의 몰개성화와 전문직적 자율성의 감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게 하였음은 물론 반빈곤 사업과 같은 예방적 사회복지실천을 주변화시키고, 사회복지조직으로 하여금 대중에게 반응하기 보다는 조직의 이익만을 챙기도록 자극하였다(Clake & Newman, 1997). 이처럼 특정 정치적, 사회적 상황 변화와 이에 대한 정부 개입의 방향과 본질은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역할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이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논의와 깊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O'Neill, 1999; Skerrett, 2000).

이처럼 법적·제도적 틀을 통한 정부 개입의 본질과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 변화는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이러한 연관관계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한국사회의 정책결정 구조에서 관료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고, 따라서 사회복지에 그러한 관료적 영향권내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지난 20여년 동안 사회복지계의 자체 노력과 정부의 인가에 힘입어 동사무소를 비롯한 공공 행정라인은 물론 전국 360여개가 넘는 사회복지관, 그리고 아동, 노인, 정신보건, 청소년 관련 제반시설을 지역사회중심의 실천 현장으로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그야말로 매우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전달체계를 만들어 내므로써 광대한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전달체계 내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필자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혁적 아젠다를 제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촉발, 형성해내는 역할보다는 국가의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치중되었다고 본다. 이는

3) “관리자주의”는 사적 기업체계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예를들면, 기업적 오리엔테이션의 도입, 규제와 평가를 통한 전문적 파워에 대한 통제, 고객의 힘의 증대, 관리적 일이 전문적 일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것, 전문적 자율성에 대한 관리적 통제 강화 등을 포함한다.

물론 사회복지 교육자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개입의 틀과 본질에 의해 영향받은 바가 크다고 본다.

최근의 한 예로, 2004년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세계화”와 “지방화”지향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지향의 핵심은 과도한 복지비용 지출에 의한 비능률과 근로의욕 저하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부문의 지방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2004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 요약보고서). 이것은 소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적 틀을 정부가 복지 부분에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들 정책기조는 아마도 제도와 법적 틀을 통해 시행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짐작컨데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지방자치단체 관료들의 강력한 영향하에서 비용의 능률과 효과를 입증해야 하고 빈곤층의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에의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나친 우려라고 여길지 모르나, 이러한 기조하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자율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보다는 자원을 관리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관리자”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정체성의 문제를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 개입이 사회복지실천에 갖는 광대한 영향력이 곧 사회복지실천이 온전히 법적 틀내에서 조형된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회복지실천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도 창의적 사고와 사회행동의 가능성의 여지는 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학문공동체를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가는 것 또한 사회복지실천의 조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실천은 국가의 의도와 목표에 지지적일 수도 있지만 국가에 반역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적 권력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가시”이기도 하다는 지적(Tompson, 2002)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정부 개입의 본질 여하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을 재정의하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문제는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기반과 지식기반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과 기능을 재설정하는 사회복지 공동체의 문제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3) 관할영역 투쟁

사회복지실천이 그 전문성과 학문적 통합성을 결여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관할 영역이 너무 다양하고 넓다는 지적인데(김태성, 1997; 미즈라이, 2003), 이 점에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관할영역과 관련한 정

체성 문제는 사회복지전문직의 대중적 이미지 즉, 일반 대중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명확하게 그려질 수 있는가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도 그 그림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넓게 퍼져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핵심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Specht & Courtney, 1995), 또 다른 혹자는 사회복지실천의 태생 자체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였으므로 오히려 이 점을 방어하지 말고 강점으로 여겨 그 사실에 축배를 들자고 한다(Glasser, 2001).

사회복지실천에서 관할영역 투쟁의 문제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전문적 지위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기술과 관할영역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사회로부터 사회복지실천이 어느 영역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독점권 확보의 열쇠는 해당 학문공동체의 지적활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생산 및 재생산 과정에서 주어지는 과제들을 통해 정해지며(김미원, 1997),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들 과제에 대한 국가(정부)의 의도 및 인근 학문영역간 경쟁이라는 변수와 함수관계에 있다.

정부는 그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인력의 울타리를 정한다. 즉, 특정 인력집단에 특정의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므로써 독점권을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련 인력집단과 정부는 간혹 긴장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 때 해당 인력집단은 정체성의 문제를 놓고 투쟁하게 된다. 일 예로 미국에서 빈곤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빈곤지역의 토착민을 사회복지실천의 보조 인력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New Careers Program에 대해 관할영역과 관련한 전문직적 정체성을 놓고 투쟁한 경우를 들 수 있다(Armour, 2002). 또한 영국에서 급진사회복지실천이 대두되자 정부는 사회복지실천의 관할영역을 놓고 너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영국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의 관할 영역과 역할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Skerrette, 2000).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경우는 바로 얼마 전까지는 사회복지실천의 관할영역을 놓고 사회복지계와 정부간에 긴장과 갈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동안 한국에는 사회복지학 외에 “삶의 상황 개선”에 직접적 관심을 갖는 개별 학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정연택, 1999). 그 결과 그동안 사회복지실천의 관할 영역은 매우 광역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정부는 사회복지계가 막연하게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다른 인력집단을 함께 고려하므로써 사회복지계와 다소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정부는 이러한 관할 영역에 대해 가장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와 같은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창출될 새로운 사회복지실천 영역과 인력집단을 고려하면 관할 영역 투쟁과 관련하여 앞으로 정부와의 긴장관계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사회서비스와 보건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므로써 소위 사회적 “돌봄”을 담당할 인력집단과 그 역할의 상징 및 배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인간관계 문제의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이를 담당할 인력집단의 투입이 요구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관할 영역과 관련한 정부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복지실천의 관할 영역은 또한 인근 학문영역간 경쟁이라는 변수에 의해 그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초 미국의 사회복지실천은 전문화를 위해 정신과학을 수용했고 그것은 사회복지사의 관할 영역을 인간의 내면의 문제에 대한 치료로 경계짓게 하였다. 그리고 이는 당시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었다. 사회복지전문직은 의사나 법률가처럼 사회내에서 지위와 위세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할 영역에 대한 논쟁을 명료하게 공개적으로 제기하므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Lymbery, 2001). 한 예로, Popple(1985)은 “사회복지전문직의 재개념화”라는 논문에서 사회복지전문직이 관할해야 하는 영역 혹은 할당받을 사회적 과제는 “의존자에 대한 관리”라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적 의존자들을 관리하는 직업이 사회복지전문직이므로 사회내 의존자들에 대한 관리문제는 사회복지전문직의 고유 영역이며, 따라서 다른 학문영역은 이 영역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관할영역 확보를 위한 명확한 논점이나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관할영역 확보가 학문공동체만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작업과 연계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아니, 오히려 명확한 논점이나 역할 개념을 제시하기는커녕 인근 학문영역으로부터 관할 영역과 관련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3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이다. 이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먼저 추진했던 가정학회 측은 가족문제에 대한 “예방” 논점 즉, “사회복지는 치료, 가정학은 예방”이라는 선명한 이분법적 논리로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였고 그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었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시민사회로 성장하면서 “삶의 상황 개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기존의 인근 학문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학문들이 “삶의 상황 개선”과 깊이 관련된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침투해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덧 사회복지계는 이들에게 기득권자로 비춰지고 있는 셈인데, 앞으로 사회복지실천 영역을 둘러싸고 인근 학문공동체간 관할 영역 투쟁은 때로는 사회복지계가 침투 당하면서 혹은 때로는 사회복지계가 침투하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정치적 능력과 함께 사회복지실천이 고유하게 담당할 수 있는 관할 영역 혹은 사회적 과제를 명료하게 설정하고 그것으로 대중적 설득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Popple(1985)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존자 관리”가 그 주된 사회적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보다 더 포괄적인 명료한 과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현재 한국사회 및 시대에 적합성을 갖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회운동과의 조우

사회운동은 사회내 변화를 촉진하거나 혹은 변화에 저항하기 위한 조직화된 노력으로 비제도화된 정치적 행동의 외양을 띤 정치적 압력의 한 형태이다.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는 명료하고 직접적이기 보다 복잡하고 다원적이다. 그러나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실천은 그 지향하는 목적과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일정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정의에의 헌신이라는 목적과 집단적 행동을 통해 사회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실천은 늘상 긴장관계를 견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긴장의 핵심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공통부분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목적과 목적달성의 수단에 있었다. 사회복지실천은 사회개혁을 그 목적으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은 사회개혁과 개인치료의 연속선상의 어딘가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도전받아야 할 그 무엇이였다. 그리고 집단적 행동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회운동의 전제는 사회복지실천에도 끌어 올 수 있는 것이었지만, 문제가 된 것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집단의 범위가 주로 개인과 가족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었고 이 점 역시 사회복지실천에 하나의 도전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Tompson, 2002).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실천의 긴장 관계는 서구 사회의 경험을 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서구 사회에서 사회운동은 사회복지실천의 사고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복지실천에 하나의 도전으로 작용하였고, 그 도전은 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내용의 선회를 촉진하였는데, 특히 사회복지실천에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경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서구 사회에서 사회운동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실천에 진보적 모델의 수용을 촉진한 것인데, 사회복지실천에서 반차별적·반억압적 실천이나 이용자 참여, 사회행동 등에 대한 강조가 그 예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실천이 추구하는 “전문가주의”의 한계를 인식케 하여 대안적 전문가주의를 고민토록 한 것인데, 엘리트주의에 근거한 전통적인 전문가주의 대신 파트너십에 근거한 전문

가주의를 대안으로 제기한 것이 그 예이다(Tompson, 2002).

한국 사회의 사회운동은 지역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들은 소위 한국사회가 시민사회로의 발걸음을 시작하기 이전에 지하운동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90년대 이후 사회의 수면 위로 당당히 올라오게 된다. 이들에게 사회복지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꿈꾸던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그 결과 사회복지에의 접촉을 시도한다. 이렇게 시작된 사회복지와 사회운동의 조우는 한국 사회복지실천에 모종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으며 그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듯 하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주도한 사회운동가들에 의해 사회복지실천 현장이 잠식되었다고 보는 입장(황성철, 1997), 반대로 이들의 사회복지에의 접근이 복지를 팽창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김연명, 2004)의 차이가 이를 말해 준다.

필자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 세력이 사회복지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의 영향이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에 모종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운동 집단이 가진 강력한 정치력과 조직력, 그리고 추진력은 새로운 복지제도의 창출을 견인하고 자극하므로써 사회복지실천의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원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나 가정폭력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은 그 한 예인데, 이들 법 제정으로 국민의 “삶의 상황 개선”에 대한 국가의 복지적 개입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사회복지실천 현장이 확대되었다. 이는 마치 미국에서 사회개혁 세력들과 사회운동으로서의 인보관운동을 지지하게 된 사회복지사들이 연대하여 노동자 보상과 모성연금, 보호적 노동입법 등 복지제도를 끌어낸 것(Abramovitz, 1998)과 유사하다.

두 번째는, 사회운동 집단은 사회복지실천에 다양한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의 형성을 자극하므로써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가치는 물론 전문가주의 지향에 대한 자기성찰을 고무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들 사회운동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와 지향점, 그리고 실천적 전략과 방법은 사회복지실천 활동이 중립적이라는 신화의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지향은 전문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이는 사회복지실천이 정치적, 이념적 행동이나 입장과 무관하다는 인식의 확대에 이어진다. 이에 대해 혹자는 사회복지실천의 몰정치성, 정치적 중립이라는 주장이 픽션이며(Sachs & Newdom, 1999) 더 나아가 그것은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한다(Abramovitz, 1998). 이들에 의하면,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의 의식이나 자원의 배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항상 정치적이었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정치적, 이념적 스펙트럼이 획일적이어서 다양성을 결여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실

천의 목적이나 가치, 전문직 지향 등에 대한 본질적 논쟁의 결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에 사회운동 집단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다양화를 촉진할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복지실천은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새롭고 신선한 가치와 개념들 그리고 실천방법들을 수혈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 집단이 가진 엄청난 실천적 에너지와 그간의 토착적 노하우는 아직 분석되지 않은 무의식 덩어리처럼 남겨져 있다고 보는데, 이들을 사회복지실천으로 끌어들이 분석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토착적 사회복지실천 방법을 발굴해 낼 수 있는 보고인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실천의 양 집단의 접촉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사회운동이 사회복지실천과 그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좀 더 깊이 천착해 들어가야 할 주제이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사회복지실천의 지형을 넓히고 실천의 가치지향에 대한 성찰을 자극하고 실천내 정치적 스펙트럼을 다양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운동 집단과 사회복지실천 집단의 긴장관계이다. 사회운동 집단이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침입해 들어온다고 보고 이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다던가, 사회복지실천이 사회개혁을 담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피동적이고 현상유지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지나친 방어막을 친다든가 하는 긴장관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 긴장관계는 사회복지실천과 사회운동의 본질적 차이에서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사회복지전문직은 그 근간을 국가의 법적 틀에 두고 있고 있는 반면, 사회운동은 사회복지전문직과는 달리 법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부유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Tompson, 2002). 결론적으로,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실천의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과의 조우는 사회복지실천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바람과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고민을 자극하므로써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 맺음말

21세기 초엽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확실히 이전 시기에 비해 정체성 면에서 더 혼란을 느끼고 있고 그것은 정체성에 대한 위기감으로 이어지는 듯 하다. 위기감의 실체는 여러 지점에서 감지되는데, 사회복지의 영역이 초광역화되면서 이들 영역을 묶어줄 공통적 기반 즉, 사회복지실천 학문의 통합성 결여에 대한 불안,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인접학문의 침투, 사회복지계 전체에 강력하게 메아리치는 '전문화' 구호의 실체가 쉽게 잡히지 않는 안타까움 등이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필자는 이 혼란과 위기감이 90년대 이후의 시민사회의 성장, 인구·사회학적 전환,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신자유주의 쇄도 등으로 상징되는 한국사

회의 급격한 변동과 그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적절한 도전과 대응의 결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즉, 한국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내어 그것을 정치적 역량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서구로부터 도입한 과학적 지식과 기능적 전문성에 지나치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여, 이제는 논의의 초점을 과학적 지식과 기능적 전문성에서 가치 기반과 정치사회적 측면으로 이동시켜보자는 것이다. 가치가 지식을 추동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독자성과 체계성에 경도된 정체성 담론을 가치와 정치사회적 구조의 수준으로 끌어내 보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그 근본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더 정치적으로, 더 사회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자면 우선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직적 정체성에 대한 속성론적 입장을 유보하고 권력론적 입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전문직이 속성론에서 말하는 특성의 속성들을 충족시키므로써 전문직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전문직 속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독자적 이론체계와 관련해 사회복지실천의 영역과 범위가 초광역적이어서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예로, 독자적 이론체계의 부재라는 사회복지실천의 콤플렉스는 20세기 초반 미국의 사회복지실천을 정신과학의 이론체계에 의존케 하므로써 사회복지실천의 토대와 지형을 변화시켰으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직화를 가져왔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전문직에 대한 속성적 접근은 탈역사적이고 탈사회적인 한계를 갖으며, 그것은 의사나 법률가와 같은 전통적 전문직에 대한 사회복지전문직의 콤플렉스를 자극하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전문직의 역할과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문직의 속성들을 들이밀면서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선언한 Flexner(1915)의 망령에서도 벗어나 다른 관점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직적 정체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에 대한 권력론적 접근은 전문직을 규정하는 요소나 정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특정의 일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그것이 곧 전문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전문직이란 이러한 독점권을 놓고 벌이는 권력투쟁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권력투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엇을 전문직적 기능의 핵심에 놓을 것이냐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체계화하여 대중적 설득력을 획득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필자가 전문직에 대한 속성론을 일단 유보하고 권력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직적 정체성 논의가 속성론에 갇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푸는 답답한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속성론에의 집착은 사회복지실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중의 하나인 해당 사회의 정치사회적 구조들에 대한 주시와

그에 따른 실천적 행동을 방해하고 간과케 한다. 반면, 권력론적 시각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직적 정체성 획득이 사회정치적 구조와 이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직이 얼마나 전문직으로 발전될 수 있는의 여부는 의존성의 통제라는 사회적 기능을 사회복지직이 얼마나 독점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다른 직업들과의 정치적, 사회적 권력투쟁에서의 승리 여부에 달려 있다”(김상균 외, 2001)는 주장은 현재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려할 때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국제사회복지사연맹(1994)의 ‘국제적 윤리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들의 서비스 책임이란 인간의 복지와 자기실현에 대한 책임이며...개인, 집단, 국가, 국제적 욕구와 갈망에 대해 자원을 개발하는 책임이고, 사회정의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Bisman, 2004). Gibelman(1999)은 미국 사회복지실천의 100년 역사를 돌아보며 “사회복지전문직은 전문직내의 선택의 힘에 의해서 보다는 전문직 밖의 힘 즉,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그 때마다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한 정의가 달랐다”고 회고한다. 필자가 보기에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명확한 가치기반과 정치사회적 구조간 역학관계에의 관여를 전제로 사회복지실천이 그 전문적 정체성 획득 투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재개념화, 전문화 혹은 전문가주의의 경계와 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이슈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실천을 재정의하고 재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의 존재 근거인 가치기반 자체를 재편성하고 구체화해야 하는데, 의존자를 관리하는 국가의 대리인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의존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할 것인지의 연속선상에서 적절한 균형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화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전문가주의 지향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는 적절한 교육모델을 통해 후세대로 재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미원(1997). "사회사업실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사회사업실천의 임상중심 경향과 전문화지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1호.
- 김상균 외(2001).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
- 김연명(2004). "한국 사회복지지의 낙후성: 기존 논의의 재검토와 몇 가지 가설".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용일(2003). "사회복지학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 2003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김인숙(2001). "사회복지실천의 탈계층화:정체성의 위기인가? 정체성의 확립인가?". 상황과복지 11호.
- 김태성(1997).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전문직, 그리고 사회복지 교육제도". 사회복지연구 9호. pp. 3-36.
- 이창호(1990). "한국 사회사업 정체성의 위기와 과제". 사회복지연구 2호. pp. 95-120.
- 이혜경(1995).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정연택(1999). "사회복지학의 정체성: 사회정책 연구를 사례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9호. pp. 290-320.
- 테리 미즈라히(2003). "미국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위상과 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 제2회 사회복지사 국제 포럼 자료집.
- 홍성민(2001).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과 탈식민주의". 21세기 정치학회보 11권 1호.
- 황성철(1997). "지역사회복지와 전문적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이론과 실천적 과제>. 1997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Abramovitz, M(1998). "Social Work and Social Reform: an Arena of Struggle". Social Work. 43(6) Nov.
- Armour, M P(2002) "Alternative Routes to Professional Status: Social Work and the New Career Program under the 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Social Service Review 76(2).
- Bisman, C(2004). "Social Work Values: The Moral Core of the Profess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4, 109-123.
- Gibelman, M(1999). "The Search for Identity: Defining Social Work-Past, Present, Future".

- Social Work, V44(4).
- Glasser, G.(2001) "Reflections of a Social Work Practitioner: Bridging the 19th and 21st Centuries". Research in Social Work Practice, 11(2).
- Haynes, K.S(1998). "The One Hundred-Year Debate: Social Reform versus Individual Treatment". Social Work, V43(6).
- Holosko, M & Leslie, D. R(2001). "Is Social Work Profession: The Canadian Response". Research in Social Work Practice, 11(2).
- Lymbery, M(2001). "Social Work at the Crossroad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1, 369-384.
- Lynn, E(1999). "Value Bases in Social Work Education". Br. J. Social Work, 29. 939-953.
- O'Neill, S(1999). "Social Work-a Profession?"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13(1). 9-18.
- Penna, S, Paylor, I & Washington, J(2000). "Globalization, Social Exclusion and the Possibilities for Global Social Work and Welfa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3(2). 109-122.
- Reish, M(1998). "The sociopolitical context and social work method: 1890-1950".
- Reisch, M. & Gorin, S. H.(2001). "Nature of Work and Future of the Social Work Profession". Social Work, V46(1).
- Sachs, J. & Newdom, F.(1999). Clinical Social Work and Social Action. Social Service Review, 2001. v75 i1.
- Skerrett, D(2000). "Social Work-a Shifting Paradigm".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14(1). 63-73.
- Swenson, C.R(1998). "Clinical Social Works' Contribution to a Social Justice Perspective". Social Work. 43(6) Nov.
- Thompson, N(2002). "Social Movements, Social Justice and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2. 711-722.